

탄소배출권, 부산 유치에 전남 “팽”

부산, 한국거래소가 거래업무 담당 ... 전남은 주먹구구에 의지 약해

전라남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업무를 부산 한국거래소(KRX)가 맡기로 확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전라남도의 유치운동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적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1월14일 “국무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환경부에서 수용한 것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을 집중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작부터 시장기능에 맡기면 탄소배출권 가격 왜곡, 거래 저조 등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기간 가격, 거래량 등의 정부통제로 탄소절감 시스템이 정착된 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전력거래소와 업무 연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주식과 파생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업무를 맡는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환경부는 1월14일 한국거래소를 최종 운영기관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라남도 공동혁신도시(나주)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가 지정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여수산업단지 등 광양만 권역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주체가 많은 특징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4년 동안 단 2차례 회의에 그쳤고, 대선 당시 요구공약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사업을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포함시키기도 해 사업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친환경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경제적 관점과 인프라를 내세운 것은 설립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동혁신도시에는 국가 전력기관이 이전해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만큼 전력거래소를 반드시 유치했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15>